

## 살인까지 부른 '농촌 인력난'... 인건비도 치솟아

### #일주\_이슈

중개인, 인력배치 다툼 농민 살해 1만원이라도 더 주면 예약 취소 적자 감수 '웃돈 제시' 농가 속출 정부,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지난달 14일 해남의 한 마을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알선하는 중개업자가 농민을 살해하는 일이 발생했다. 모내기 작업에 일꾼 두명을 보내달라는 농민 요구에 중개업자가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며 다툼을 벌인 것이 비극의 시작이었다.

양파·마늘 등 지역을 대표하는 농산물이 본격 수확철을 맞았지만 부족한 일손과 치솟는 인건비에 농민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3개월 연장해주는 개선방안을 내놔지만 농촌 인력난 해소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농촌지역 일손 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코로나19로 입국이 제한됐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엔데믹 이후 한국 땅을 밟고 있지만 농촌 인력난은 여전히 최고인 인건비 상승 등 고통도 심해졌다는 게 농민들의 하소연이다.

전남의 경우 양파·마늘 수확과 모내기 등 농번기철, 외국인 고용을 위해서는 10일 전 예약이 필수다. 일부 중개업자는 예약이 됐더라도 인건비를 더 주는 곳으로 인력을 배치해 농민들 간 쟁탈전도 치열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고용한 농가에서 일한 근로자 중 50.2%가 외국인으로 나타났다.

2020년 당시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이

였기 때문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됐고, 고용허가제를 통한 인력조차도 방역 우수국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만 허가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과반이었다는 것은 농촌인력의 불법체류자 의존도가 상당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많은 단기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급한 불은 끈 상황이지만, 마늘·양파 수확, 벼농사 등이 본격 시작되면서 인력난은 여전하다.

어떻게 일손을 구했다더라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터로 가는 도중 1만원이라도 더 준다는 곳이 나타나면 다른 현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일도 부지기수와 농민들의 속은 더욱 타들어가고 있다. 농민들은 일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더 높은 인건비를 제시하며 '올더 거자먹기' 식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최대 8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파종·수확기 계절적 농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운영하고 있다. 계절근로제는 농어촌에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업 분야 계절적 구인난 해소를 위해 추진해왔으나 체류기간이 5개월로 다소 짧다는 현장·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였다.

전남도 관계자는 "6월 중 단기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2000명 가량이 입국하게 된다. 당장 인력난 해소까지는 어렵겠지만 최근 정부에서 계절근로자 체류기간도 연장했기 때문에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입국 절차가 완화돼 더 많은 일손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2·3면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지난 3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황일봉 5·18부상자회장과 정성국 5·18공로사회장, 임성록 대한민국특전사동지회 광주지부 고문, 5·18 유족 임근단 여사 등이 참배를 위해 들어서려다 시민단체와의 충돌을 우려해 길을 가로 막은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며 항의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 특전사회·시민단체 5·18묘지 충돌... 자체 조사위도 무산

3일 묘지 방문했다가 못 들어가 4월 출범 '특전사조사위'도 중단 '정부 조사 겹쳐 사실상 무의미'

특전사단체의 '국립5·18민주묘지 사회 참배'가 시민사회의 반발로 저지당한 가운데, 지난달 출범한 자체 진상규명조사위도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5·18 부상자회·유공자회·특전사동지회는 지난 3일 오전 11시40분께 오월 영령 참배를 위해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았다. 그러나 민주묘지 앞에서 '진실 고백 없는 사죄는 보여주지 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이들의 참배를 막던 오월정신지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 100여명에게 저지당해 입장하지 못했다.

5·18 단체와 특전사회는 "참배를 막지 말라. 국민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민주묘지를

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냐"며 반발했다.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한 경찰의 '인간벽'이 세워지는 등 1시간의 대치 끝에 결국 특전사회와 두 공법단체는 간단한 목례를 진행하는 것으로 참배를 대신했다.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 특전사회는 다음 날인 4일 개인 참배 등으로 오월 영령에 사죄했다.

임성록 특전사회 고문은 이날 오전 민주묘지 개인 참배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동지회를 대표해 참배했다. 전날 돌아갈 수밖에 없어 아쉬웠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증언 확보 등 진상규명에 다가가기 위한 행보를 하고 있다"며 "다만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위가 활동하고 있어 중복 조사가 우려되는 등의 이유로 자체 조사위 활동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임 고문의 발언은 지난 4월 특전사회가

광주항쟁 당시 공수부대의 만행을 조사하기 위해 자체 출범한 '특전사 5·18자체조사 위원회'의 무산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임 고문은 "특전사조사위 활동 취소와 별개로 5·18회원들을 상대로 한 증언들을 모을 계획"이라며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총을 직접 쏘 가해자들을 찾아 연결시키는 등 미시적인 부분의 조사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정성현 기자

광주사람들 (528/1000)

**문재원**  
퍼스널 트레이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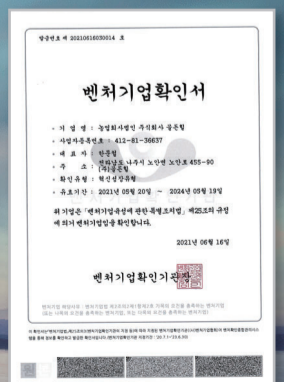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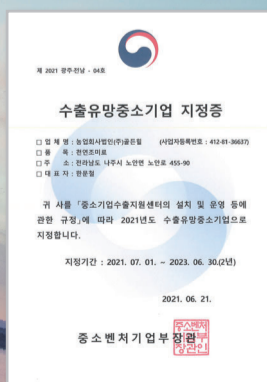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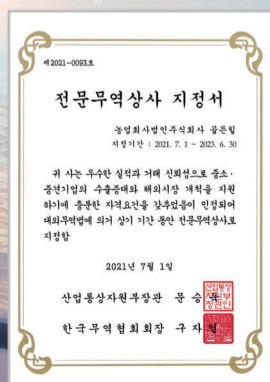
문의: 010-9300-1711

현충일... 6일자 신문 쉽니다

## GOLDEN HILL

생명의 땅, 청정 전남에서 나고 자란 우수한 농수산물을 지구촌 곳곳에 알립니다. 골든힐은 수출에 관심 있는 전남소재 식품제조사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全南日報가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주)골든힐

전남 나주시 노안면 노안로 455-90 | T. 061.332.1998 F. 061.334.1997 | E. golden0311@naver.com